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
----------	----

2014년 9월 24일

교 육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년 8월 11일, 이행자의원, 장우윤의원 외 19명

나. 회부일자 : 2014년 8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25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4년 9월 24일 상정, 원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행자 의원)

-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재정으로는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책사업을 감당하기에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친환경무상급식과 같은 교육복지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태임.

- 더욱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인하여 시·도 교육청 세입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연주)

- 동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27%의 비율로 교부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5%까지 상향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 2014년도 기준 내국세 총액은 179조 6,210억원으로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7%에 해당하는 36조 4,092억원이고, 서울시 교육청에 교부된 교부금 총액은 4조 4,266억원임.

#### 내국세 비율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액

2014년 기준 내국세 총액	현 교부율 (20.27%)	교부율 3% 인상 (23.27%)	교부율 25% 인상
179조 6,210억원	36조 4,092억원	41조 7,978억원	44조 9,052억원
현 교부율 대비 증감액		5조 3,886억원	8조 4,960억원
교부율 증가시 서울증가액(11.68%)		6,293억원	9,923억원

※ 내국세 교부율 1% 증가시 : 1조 7,962억원 증가

※ 서울시교육청 증가액은 최근 3년치 보통교부금 평균 비율 11.68% 적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4 예산	2013 예산	증감액	증가율	비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8,681	410,619	△1,938	△0.5	
서울시 확정 교부액	44,266	46,317	△2,051	△4.4	

- 한편 2014년도 서울시교육청 세출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 4조 8,081억원, 기관운영비 408억원, 학교운영비 6,582억원 등 경직성경비가 전체 예산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전체 예산의 약 25%에 불과한 실정임.
  
- 비경직성경비 중 교육사업비는 1조 5,348억원, 시설사업비는 2,674억원으로 교육사업비 대 시설사업비의 비율은 5.7:1이고, 특히 교육사업비의 경우 1조 5,348억원 중 누리과정, 무상급식, 저소득 지원, 교과서지원, 초등돌봄교실, 교육복지특별지원 등 6개 사업에 1조 761억원이 편성되어 전체 교육사업비의 약 70.1%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교육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예산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와 같이 지방교육재정의 상황이 극도로 열악하게 된 원인은 기본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이와 더불어 지난 2013년부터 확대 실시된 누리과정사업과 2014년부터 전면 무상실시 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에 기인하고 있음.

- 누리과정사업의 경우 2012년도에 2,062억원이었던 예산이 2013년도에 4,77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31.7%가 증액되었고,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2013년도에 204억원이었던 예산이 2014년도에 44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19.3% 증액되는 등 두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나치게 급증하였음.
- 문제는 중앙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상기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대부분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파탄과 종국적으로 지방교육자치가 형해화(形骸化)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임.
- 이러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극복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전성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시책사업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하여야 함.
-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교부금 비율을 현재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 건의는 충분히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24
----------	----

발의년월일 : 2014년 8월 11일

발의자 : 이행자, 장우윤, 김동율, 김혜련,  
문형주, 유 용, 유찬종, 김진철,  
맹진영, 최웅식, 전철수, 김문수,  
장인홍, 문영민, 김용석(서초4),  
강성언, 김생환, 황준환, 송재형,  
김창수, 박호근 의원 (21명)

## 1. 주문

-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재정으로는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책사업을 감당하기에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친환경무상급식과 같은 교육복지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태임. 더욱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인하여 시도 교육청 세입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함.

## 2. 제안이유

- 현재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각종 정부시책과 지역현안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의 지방교육재정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음.

- 특히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책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지방교육 사업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
- 또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의 경우 전국적인 단위에서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더욱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인하여 세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증가율이 급격하게 감소되어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함.

### **3. 이송처**

-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부, 기획재정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문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증대되는 정부시책사업으로 말미암아 지방교육재정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격차에서 비롯된 경제적 양극화에 기인하여 보편적 복지에 대한 수요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며, 특히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교육에 있어서의 복지는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중앙정부는 교육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상태가 이러한 국책사업을 시행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4년도 누리과정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약 5,473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육사업비의 약 35.7%, 전체 복지예산의 약 50.9%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다. 즉 국책사업인 누리과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육사업이나 시설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또한 이제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시·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상징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재정부담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의 결손이 지방교육재정을 열악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서울시로부터의 전입금이 세입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서울시의 세수 결손으로 인하여 교육정책 전반에 있어서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해마다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액은 인건비,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분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정부주도의 국책사업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점을 모색하고 교육복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27%에 불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5%로 상향조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4. 8. 1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